

아침세평

김진구

광주시교육청시민협력처장



교직의 시작은 국도 27호선 비포장길이었다. 첫 발령 받은 학교가 고흥 반도 끝에 있는 녹동고등학교였다. 남광주 간이역에서 이불 붓집과 함께 광주여행(현 금호고속)에 올랐다. 고흥읍까지는 그런데로 포장된 길이었다. 고흥읍에서 녹동까지는 급이급이 신작로였다. 여관방에 짐을 맡겨 놓고 비봉산 아래 자리잡은 개교 5년째 학교로 걸어갔다. 1학년 3반, 여고생 64명이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창문 너머 바다가 보이는 교단에 서서, 교편을 잡고, 신록예찬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제자도 만날 겸 녹동항을 찾아가다. 한마디로 암전했던 경옥, 밝고 맑았던 명숙, 선하고 말없이 조신했던 영숙이 마중 나왔다. 향구의 이별이 아니라 재회(再會)다. 녹동항은 바닷물로 출렁이고, 내 불은 주르륵 눈물로 젖었다. 어판장을 옮겨놓은 듯 만난 해를 전치상에 고교 시절 총각선생 뒷담화도 올려 놓으니 엇그제 같은 세월이었다. 보건 의료계, 지역사회 봉사, 목회 활동 등 열심히 살아온 할머니 제자들이다. 한 잔 술로 선창가에 서니 눈앞이 소록도다.

포장된 4차선 그리고 우리들의 천국

연락선 5분 거리, 저 건너지만 현영의 아픔은 9만리 통한의 머나먼 거리이다. 단절을 위한 공간이었으니 한 번 들어가서 평생을 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환자들 많았을 것이다. 파도가 이 작은 사슴섬을 아무리 씻기들 서린 한을 어찌 지울 수 있겠는가.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낮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가도 가도 황톳길/ 내 발가락이 하나씩 빠지는 길// 해는 자운영(紫雲英) 꽃 속에 날 저물고/ 보리피리 슬피 불며/ 가도가도 황톳길” 한하운의 시 '전라도 길'의 일부다. 나병이 악화돼 소록도로 가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를 견디며 걸어야 했던 고독한 형벌의 길이다. ‘가도 가도 황톳길’ 구절이 세 번이나 반복된다. 가기만 하면, 소록도에 닿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신천지가 아니라 기약 없는 막막함의 절규였을 것이다. 시인이 딱박한 삶을 투해냈던 가도 가도 ‘황톳길’은 이제 매끄러운 4차선 아스팔트로 덮여 있다. 하지만 뿌연 먼지길에 고단한 시인은 사라졌어도, 그가 겪었을 단절과 소외의 고통은 길가에 핀 짙푸른 향기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듯했다. 그리고 소록도는 이창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으로도 우리 문학사에 기록된다. ‘지배하는 자의 천국은 지배를 받는 자에게는 지옥일 뿐이다’란 제목과 주제를 연결해준 한 문장이다. 오마도 간척 공사 등 나병 환자들에게 낙원을 만들어주려는 지배자의 헌신과 소통 없이 강요된 피지

배자의 입장이 충돌한다. 지배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도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세상일뿐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한 반복되는 파도에도 정박한 화물선은 쉬고 있다. 적재함이 비었는지 고동색 하체를 들어내고 무심하게 맞고 있다. 늘어선 어선들은 나름의 무게로 흔들린다. 이 휴식이 끝나면 대양으로, 어장으로 각각의 길로 떠날 것이다. 가는 길이 어디든 배의 본질은 정박이 아니라 항해에 있으리라. 인생도 고통으로 출렁이든 행복으로 잔잔하든 항해를 멈추면 끝 아닌가. 나는 교직의 긴 항해를 마치고 생의 항구에서 머물고 있다. 돌이켜보니 배는 배운을 찾아가는 학교였고, 교편은 노였다. 교학상장이었기에 학생은 동승자요 동반자였다. 지난 세월만큼이나 많이도 변했다. 배를 타고 가정방문을 갔던 소록도, 거금도(금산)는 거대한 연륙교로 연결돼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맛집과 해풍에 젖고, 녹동항 불꽃축제는 밤바다에 찬란하다. 이제 구불했던 황톳길은 직진의 포장길이 되었으니, 당신들의 천국은 우리들의 천국으로 바뀔까. 학생들은 더 평안하고, 교사들은 더 보람 있고, 학교는 더 우뚝한 배움터인가. 녹동항의 파도 소리를 뒤로 하고 차에 올랐다. 마음 한 조각을 제자들 곁에 두고 왔다. 그곳 붉은 흙 속에 묻어두고 왔다. 오는 길에 유령마차는 과역면의 한 국밥집에 들렀다. 세상살이 별 것 없는가. 선지가 허 위에서 보일어할 한 맛의 천국을 만들어줬다.

기고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이제는 본격적인 실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됐고, 시행령안도 입법 예고됐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광역 단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그 성패를 가를 조건은 명확하다. 바로 교육 균형이다. 지금의 전남지역 교육 여건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지막 기반이자, 인구 유출을 지연시키는 최소한에 보무다. 학교의 존속 여부는 곧 지역의 존속 문제와 골조 직결된다. 문제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광주는 도시형 인프라가 밀집된 환경이다. 반면 전남은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 밀도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구조다. 동일한 기준과 효율 논리로 접근할 경우, 결과는 불균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남·광주 통합, ‘교육 균형’이 성패 가른다

만약 행정통합 이후 예산·교원·교육시설 배치가 인구 규모와 집적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농산어촌 지역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교육 격차를 넘어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합이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격차 확대의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그런 이유로 통합특별법에는 일정 부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장치가 포함돼 있다.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 △학년제 통합운영과 교원 교차지도를 통한 운영 유연성 확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존재만으로 결과가 담보되지는 않는다. 실행 설계와 정책 의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법 조문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통합의 성패는 구체적인 제도화 수준과 정책 집행 방향에 달려 있다. 우선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특례는 조례 수준에서 명확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학생 수 기준 완화, 교원 가산 배치,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은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재정 배분 구조 역시 재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인구 비례 방식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권역별 최소 예산 보장과 균형 가중치 도입이 병행되지 않으면, 농산어촌 교육 기반은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접근도 전환이 요구된다. 통폐합 중심의 정책은 단기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기반을 훼손한다. 복합교육 거점화, 공동 교육과정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체계 구축 등 기능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작은 학교는 비효율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유지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다. 교육 기회와 배분 방식,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선택이다. 균형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다. 반대로 교육 균형을 전제로 한 통합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남의 농산어촌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다. 통합의 방향이 이 점을 외면한다면, 그 성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 시점의 통합교육 성패는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어떻게 배치하고 보장할 것인가의 제도적 안착에 있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전남 교육의 특수성과 농산어촌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때, 비로소 통합은 ‘상생’의 이름으로 완성될 것이다.

만약 행정통합 이후 예산·교원·교육시설 배치가 인구 규모와 집적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농산어촌 지역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교육 격차를 넘어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합이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격차 확대의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그런 이유로 통합특별법에는 일정 부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장치가 포함돼 있다.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 △학년제 통합운영과 교원 교차지도를 통한 운영 유연성 확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존재만으로 결과가 담보되지는 않는다. 실행 설계와 정책 의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법 조문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통합의 성패는 구체적인 제도화 수준과 정책 집행 방향에 달려 있다. 우선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특례는 조례 수준에서 명확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학생 수 기준 완화, 교원 가산 배치,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은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재정 배분 구조 역시 재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인구 비례 방식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권역별 최소 예산 보장과 균형 가중치 도입이 병행되지 않으면, 농산어촌 교육 기반은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접근도 전환이 요구된다. 통폐합 중심의 정책은 단기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기반을 훼손한다. 복합교육 거점화, 공동 교육과정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체계 구축 등 기능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작은 학교는 비효율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유지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다. 교육 기회와 배분 방식,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선택이다. 균형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다. 반대로 교육 균형을 전제로 한 통합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남의 농산어촌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다. 통합의 방향이 이 점을 외면한다면, 그 성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 시점의 통합교육 성패는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어떻게 배치하고 보장할 것인가의 제도적 안착에 있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전남 교육의 특수성과 농산어촌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때, 비로소 통합은 ‘상생’의 이름으로 완성될 것이다.

취재수첩

남아도는 전기...산업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엄재용

경제부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전남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췄고, 해상풍력과 태양광에서도 ‘에너지 수도’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기는 넘치는 데 쓸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인 213%를 넘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다. 생산된 전력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지역에는 출력 제어와 송전망 부족 등의 문제만 남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높아졌지만 지역 내 소비와 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는 구조는 여전히 약하다. 광주·전남의 현실은 더욱 대비된다. 광주는 전력 자립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반면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을 생산한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한 지역경제 포럼에서 나온 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단순히 태양광·풍력 설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을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다시 산업과 일자리,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AI 산업 확대는 광주·전남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높은 전남과 AI 기반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광주가 연계된다면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도 가능하다. 물론 송전망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들어오는 산업도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발전 산업이 아니다. 산업 전력이 되고 지역 생존 전략이다. 이제는 ‘얼마나 생산했는가’보다 ‘어떻게 연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전남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생산량 경쟁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독자투고

노쇼 사기 실체 바로 알고 대처하자

최근 농도인 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노쇼(No-Show)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주요 업종 이외에 병원, 키즈카페, 주유소, 세탁소, 당구장 등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기존 소방, 지자체를 사칭한 소방점검 수법을 변형해 식약처 등을 사칭한 위생점검을 빌미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경제심을 무너뜨리는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농촌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 지역 주유소에 소방기관을 사칭해 위조 공문서를 보내 ‘소방점검 대비 소방용품을 비치’를 위해 지정된 업체에서 소방용품을 구매하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강요하며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범죄피해 예방에 있어 왕도는 없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로 의심이 될 경우 차분히 재확인하는 절차를 절대 잊지 말자. 자영업자 모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쇼 유형 및 대처방법을 평소 숙지하는 한편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 나와 이웃의 범죄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사설

전라·광주권, 삶의 질 열악...대책 절실

광주와 전라권(전남·전북)이 다른 광역권에 비해 생활전반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최근 민주연구원의 ‘2026 불평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불평등 보고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소득, 부동산, 인구,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8개 영역의 격차를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지표인 지역종합격차지수로 산출해 분석했다. 전라·광주권은 광주·전남·북 41개 시·군·구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라·광주권 시·군·구의 39%가 전국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에 해당했다. 이는 전국 6개 권역 중 비율이 가장 높다. 실제로 ‘하위 20%’에 대구·경북권은 32.3%, 충청권은 25%, 강원·제주권은 25%, 부울경권은 18%, 수도권은 0%였다. 반면 전국 상위 20% 시·군·구 비율에서는 전라·광주권은 9.8%로 하위권을 면하지 못했다. 수도권은 37.9%로 가장 높았다. 전라·광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영역별 격차가 가장 큰 것은 부동산 분야(27.1%)였다. 이어 대중교통 접근성 25.5%, 소득 19.3%, 건강 10.4% 순이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한정해 보면 지역별로 취약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남·고흥·보성·완도 등 남해안 군 단위 지역은 일자리 영역이 취약했고 보성·장흥·강진은 인구 영역, 고흥·영암은 소득 영역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대체적으로 주거 영역이 약했으며 전남 농산어촌권은 일자리 부족·인구 감소·소득 취약 등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과제로 제시됐다. 순천·여수·광양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기반은 높지만 교육 영역 지표에서 약점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 불평등을 소득 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 전반의 격차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여기에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현실적 격차를 정밀하게 진단,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전남 ‘정원 관광 프로그램’ 기대되는 이유

전남도가 ‘정원관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원관광 1000만명 시대’ 선도를 위해 국립정원문화원과 협력, 전국 최초로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운영기로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정원·수목원·산림휴양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별·계절별·테마별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체류형 정원관광 시범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정원 입장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장료의 50%를 지역화폐로 지원,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소비와 정원 운영자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은 민간 주도 참여와 관광객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형 하루 코스’와 남도를 구석구석 여행하는 ‘체류형 1박2일·2박3일 코스’로 운영기로 했다. 여기에서 ‘자유형 하루 코스’는 지역 민간 정원·수목원 35개소를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으로 참여자가 10개소 등을 일주한 뒤 스탬프 투어북을 국립정원문화원에 제출하면 기념메달을 제공하고 2026 민간정원 페스티벌에 초청기로 했다. 또 ‘체류형 코스’는 정원이 아름다운 봄·가을철과 휴가철에 19회 운영하는 데 전문 정원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별 이야기와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품격 있는 정원 여행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전국 최초로 남도의 맛과 풍류를 담은 다양한 정원을 여행하는 ‘남도정원 산책’ 코스를 선보였다. 코스는 전남도와 국립정원문화원이 1년여간 답사 등을 통해 ‘테마코스’ 5개, 시·군별 ‘지역코스’ 13개 등 총 19개 코스를 선정해 운영했다. 사실 전남은 생활 주변 곳곳에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정원이 공존하는 정원관광에 적합한 지역이어서 ‘정원의 보고’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 등 국가정원 1개소와 죽녹원 등 지방정원 2개소, 민간정원 30개소가 있는데다 2024년에는 산림청 등이 선정 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전남 민간 정원 10곳이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정원이 많다. 이번 프로그램이 남도 정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남이 정원관광을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겸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경 채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자	사 진 부 370-7050	서 울 지 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